

# “가상자산, 경제전반 영향력 확대... ‘이용자 보호’ 최우선”

## 금감원, 가상자산 CEO 간담회

이찬진 원장

“과도 이벤트·고위험 상품 지양 신뢰할 수 있는 상품 제공하고 인프라 구축 등 IT 안정성 중요”



이찬진(왼쪽에서 여덟번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보호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 자산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감독당국 수장이 직접 업계와 소통하며 시장 건전성과 책임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금감원은 3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원화거래소 4곳과 돌핀, 바우맨, 포블게이트,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디에스알브이랩스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다사·DAXA) 임직원도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때 투기의 산물로 치부되던 가상자산이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질서와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며 “국내 시장도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정책과 맞물려 크게 성장할 것”이

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성장과 발전은 이용자를 단순한 이익 창출 대상으로 여길 때는 지속될 수 없다”며 “과도한 이벤트와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IT 안전성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거래소 안정적 서비스와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인적 오류나 관리 소홀에 따른 ‘먹통 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취약점이 보안사고로 확산되면 최근 금융·통신사 사례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

자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IT 안정성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며 IT 인프라 구축과 안정성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거래소가 시장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투자 확대 등 자체 감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AI와 온체인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실물경제와의 연계가 빠르게 확대되는 점도 경계 대상으로 보고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

F 등이 금융·실물경제와 맞물리는 만큼 작은 충격도 금융 불안으로 변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급격한 시장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CEO들은 “이용자 보호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서울 ‘신통기획 시즌2’ 착공·입주단계서 병목 전문가, 반쪽성과 우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줄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내놨다.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세입자 이주 촉진 등 세 갈래 전략을 통해 최대 6.5년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갈등 요인과 사업성 제약으로 속도전이 반쪽 성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즌2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치 간소화,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 축소, 해체계획서 간소화 등을 통해 기간을 12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 단축 효과는 분명하지만 착공·입주 단계에서의 병목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30일 “신속기획 시즌2는 행정 심의 기간을 줄이고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해 노후 주거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부분적 성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 단계까지는 속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이주·철거 갈등, 분담금 부담, 공사비 상승이 맞물리면 착공과 입주 단계에서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강남·도심처럼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효과가 있겠지만 외곽은 추진력이 떨어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 “코스피 5000시대, 자본시장 선순환 효과”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 한국거래소·증권사와 활성화 논의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됐고, 우리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하는 ‘코스피 5000’ 시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부가가치를 연속적으로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것.”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 임원 및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

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새로운 기술개발, 설비투자,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와 소비 확대를 발생시켜 기업의 매출 증가도 돌아오게 된다”며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던 돈줄기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유지되고 있는 코스피의 우상향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배 수준에서 지금은 1.2배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 차원에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코스피 5000시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세계유산 축전

## 2025

### 고창의 보물, 자연과 사람을 그리다

## 10/2 - 10/22

### 고창 고인돌·갯벌

주최

국가유산청

주관

국가유산진흥원

주관

고창군

주관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